

# 민주,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단독처리

###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지역경제, 심폐소생술 필요한 응급 상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로 못박았

다"며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붕괴시키고 숫자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이유로 지역화폐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라며 "국가 채무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투입해서 소비 심리를 살리면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이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모경중 의원은 "지역화폐법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찌감치 의견을 보여주지 않았던 야당 위원들께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때 못지 않게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도 더 안 좋기 때문에 지방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거 행안부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지역화폐법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통과된 법률안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조정 반영하는 것이 단서 조항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검찰권 오남용' 사건 조사 근거 마련

### 민형배·서왕진·한창민, 특별법 공동발의 尹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 사건 대상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형배·한창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정보부·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 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 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 "新균형성장 전략 '5극 3특' 설계도 만들 것"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공직에 복귀한 것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 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이다. /김진수기자

## 도정현안 논의 실국장 '도시락회의'

### 김지사 "도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새 정부 출범과 여름철 재난 대비 등 실·국별로 바쁜 업무 일정을 감안해 10일 실·국장 도시락회의를 열어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도정 핵심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대응 등을 위해 모든 실·국이 비상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김영록 지사가 속도감과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조해 실·국장들이 내부 행정업무와 현장 소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간부회의 시간 맞추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양시원기자

##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확정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0일 김화진(사진) 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7일부터 전남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실시한 결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했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당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 전남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위원장 선출을 의결하게 된다.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출이 승인되면 임기 1년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